



교육 평등주의와 능력주의의 갈등

-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 석 수 |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장

들어가는 말

정부가 교육정책을 발표하면 그 정책의 타당성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는 한다. 교육 평등주의를 절대시하는 그룹과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져 보편성(普遍性)과 수월성(秀越性)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잣대로 해석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평등주의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며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의 출제방식 및 점수표기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이는 교육평등주의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 그러나 평등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모두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며 점수표기 방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그룹도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으

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기본 취지와 방향, 타당성에 대해 혼란과 오해를 초래하고 교육관련 단체나 수혜집단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수 있다. 더구나 추구하는 가치의 스펙트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면서도 제시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에는 비교적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모적 논란만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시시각각 발생하는 교육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실성(relevance)있는 정부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교육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형평성 혹은 보편성은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교육 기회 균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수월성은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야 하며 교육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엘리트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운영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

1) 홍찬식, '교육평등주의자들의 착각', 조선일보 2004. 9. 18.

안에 대한 평등주의적 관점과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의 올바른 해석 및 바람직한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 평등주의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

교육 평등주의 관점에서는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전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 학벌타파 문제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적 맥락, 사회의 인력충원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어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선발제도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그 실현 가능성이 적고 반대 입장에서 오히려 본고사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 약화를 주장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수능 등급을 5등급 이하로 하거나 9등급으로 할 경우에는 각 등급 인원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등급으로 할 경우 한 등급 안에 너무 많은 학생이 포함되어(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 사실상 변별자료로 기능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으며, 실제 대학측은 15등급 이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수능 9등급으로 의견이 좁혀지면서 이들은 1등급의 비율을 7% 정도로 확대해줄 것을 강

력하게 요구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1등급을 4%로 할 경우 이는 주요대학의 입학정원과 비슷한 규모가 되어 학벌구조 및 수능 성적위주의 전형을 고착화시킨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등급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경우 논리가 미약하여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학교현장의 진학지도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척도로 인정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행 표준 9등급(stanine)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교육 평등주의적 관점에 있는 일부 교직원체나 학부모단체가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반대 투쟁을 벌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논술이나 심층면접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에 따른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입학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비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교육비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수능을 대비한 반복적 문제풀이형 사교육은 소모적이지만 독서나 토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지출까지 동일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논술지도 교재 개발 및 보급, 독서 매뉴얼 개발을 통한 독서결과의 학생부 기록, 교내 토론 학습 강화 등 학교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독서지도 및 글쓰기·토론 능력을 함양시키고,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고교-대학 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논술고사 출제시 고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변칙적인 형태의 본고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능력주의 관점에서의 문제제기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정부의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기여 입학제 금지 법제화 추진과 관련하여 이를 교육 소비에트화, 교육 쿠데타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S대학 총장은 본고사를 볼지 안 볼지는 대학에 맡겨야 하며 고교 등급제와 관련하여 학교간 학력차이가 있다는 것을 대학이 인정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²⁾ 우선, 고교 등급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내신반영과 관련하여 학교차 문제를 거론하는데, 현행 고교 평준화체제하에서 고교 등급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부정확한 학교차에 의거 획일적으로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은 자칫 대학진학 연좌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선배들의 진학실적으로 후배들의 진학 기회가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단위가 아니라 개인이 어떤 능력과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능 성적에 차이가 있으니 내신성적 산정에서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전형요소

간 차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각 전형요소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보다는 논술이나 면접, 내신에 강한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부, 수능, 논술 및 면접 등을 서로 보완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다.

고교 등급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계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첫째, 등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고등학교를 정확한 간극에 의해 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도 마땅하지 않고 그 분류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개인차를 무시하여 선의의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고교가 B고교보다 평균 수능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B고교의 학생 중에는 내신 동일등급의 A고교 학생보다 더 높은 수능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다. 셋째, 신설 고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와 2천개가 넘는 고교에 대한 변화되는 정보를 수정·보완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에 의하든 자의적이라는 비난과 법적 다툼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³⁾

본고사는 학생선발의 대학 자율화 측면에서도 도입된 경험이 있으나 과열과외문제, 고교교육과정 파행 초래 등의 문제점으로 81학년도에 폐지됐고, 94학년도에 다시 도입되었지만 3년을 못 넘기고 97학년도에 폐지되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봐도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은 학생선발 자율권을 본

2) 조선일보(2004. 10. 15; 2005. 1. 1) 참조.

3) 한석수, '새 대입시에서 대학이 할 일', 국민일보 2004. 9. 6.

고사와 연결시키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대학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선발방안을 구안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적위주의 한줄세우기식 선발 관행을 탈피하여 잠재능력을 갖춘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제대로 교육시키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유명 대학들의 경우에는 학생 구성원들의 다양화를 위해 인종간, 지역간, 계층간 출신 학생들의 적정 비율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대에서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하여 호응을 얻었는데 그 정원을 현재 20%에서 50% 정도로 늘리고 최소 자격기준도 현재 수능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완화한다면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능력이 문제된다면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만들면 될 것이다. 입학정원의 10% 정도는 중도 탈락시키고, 필요하다면 편입학 제도를 통해 중간 수혈하는 학사관리체제로 전환한다면 학생의 풀도 다양하게 구성되고 대학 분위기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며 부의 정당성 및 청빈성이 그리 높게 수용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계층간 골만 깊게 하고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크다. 기여문화를 크게 왜곡시켜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사회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줄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자들의 순수한 동

기조차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도외시키고 재정확충이 어렵다고 대학마저 일확천금의 파우스트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⁵⁾

한편, 능력주의적 관점에서는 수능의 변별력 약화 및 내신 비중 강화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그러나 수능 등급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혹자는 이번에 9등급제가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수능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으로 표기되는데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는 등급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노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이였다. 예를 들어, 2001학년도까지는 영역별 원점수, 총점(소수점)까지 제공했으나 2002학년도부터 총점은 삭제하고 대신 등급을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더 나아가 원점수와 종합등급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능의 성적표기 방법을 개선해온 것은 수능성적에 의한 한줄 세우기식 선발을 억제하고, 1~2점 혹은 소수점 차이를 위한 치열한 수능점수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순수 교육 정책적 고려를 교육평등주의 개입이나 전략 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수능과 같은 전국단위 시험보다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적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

4) 한석수, '정부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노력의 역할과 한계', 대학교육 vol. 128

5) 한석수, '기여입학제 도입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2003. 11. 24.

“

우리 교육계에는 언제부터 수월성/형평성, 자유주의/평등주의 등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타협과 협상의 여지까지 막아버려 발전적 대안 모색까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

시켜 대입전형시 그 반영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부의 반영비중 강화는 사회 계층간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비 강남 8학군의 서울대 입학비율은 특히 82, 86, 94, 및 97학년도에 낮아졌는데,⁶⁾ 흥미로운 것은 이때마다 서울대의 내신 반영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⁷⁾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능시험은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미국의 학업적성시험(SAT: scholastic aptitude test)을 모델로 통합교과적 출제를 지향하며 94학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얼마간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사교육시장에 완전 잠식되어 오히려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주범이 되어버렸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위주로 수능을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의 추세는 미국에서도 일고 있다. 즉, 미국의 SAT도 학교교육과 동떨어진 출제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당초 적성(aptitude) 테스트에서 평가(assessment)로 기능이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약칭은 SAT로 동일하지만 학력평가시험(SAT: scholastic assessment test)으로 불리며, 문항구성에 있어서도 과목별 시험성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는 말

우리 교육계에는 언제부터 수월성/형평성, 자유주의/평등주의 등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해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타협과 협

6) 김광익 외 3,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2004. 1.

7) 한석수, '정부의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노력의 역할과 한계' 대학교육 vol. 128

8) 안병영 교육부총리 서신, 'K형' (2004. 10. 1)

상의 여지까지 막아버려 발전적 대안 모색까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새'라는 시에서 박남수 시인의 읊조림처럼,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교육부총리의 지적대로 교육의 경우 수월성과 보편성, 경쟁력과 사회적 형평이 상충할 때가 많다. 그러나 양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과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된다.⁸⁾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수월성과 보편성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낮추었으며,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 개발·공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을 활성화하였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의 수월성 교육 실현을 위해 특목고 등을 대상으로 이공계 및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동일

계 특별전형과 대학교육과 연계한 심화학습과정(AP제도)을 도입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완전한 대학 학생선발 자율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의 평가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소모적인 갈등과 편협한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월 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입장에서 극단적인 주장만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배가 산으로 향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로 덕담을 나누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간다면 거둬댈 폭풍우 속 난항을 벗어나 머지않아 학생선발제도 미로 탈출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